

민주 호남특위, SK·삼성에 '반도체 광주공장' 공개 제안

'광주 빛그린산단·미래차 국가산단, 첨단3지구' 공식 추천

AI 모빌리티 산업과 시너지... 세계 혜택·규제 완화·인프라 지원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광주 빛그린산단·미래차 국가산단(광주·함평 접경)과 첨단3지구(광주·장성 접경) 등 광주 지역 2곳을 반도체 공장 신설 최적지로 공식 추천했다.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은 15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인구 유출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반도체 기업의 광주 유치"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 및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와 함께 있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광주를 반도체 첨단 패키징 중심지로 지정한 것은 호남특위 차원에서 기간 나누는 정책 논의와 건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세계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광주는 인력 수급과 정주 여건, 산업융지 비용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밝혔다.

호남특위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조성 후보지로는 두 곳을 꼽았다.

그는 "빛그린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광주·함평 접경 지역)은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AI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후보지로는 "첨단3지구(광주·장성 접경 지역)를 국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기업, 대학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패키징 및 반도체 R&D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앵커기업 유치 지원과 함께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설립,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이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광주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실질적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호남특위 차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태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기초비례 경선 '당원 50%' 반영 당헌 개정

지방선거 공천률... 방식·실시 여부 등은 최고위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내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597표 중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528명(88.44%)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

개정 전 기존 당헌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상무위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원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후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에서 이른 바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되면서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됐다.

특히 수정 과정에서 상무위원 권리를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 기초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토록 조정됐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당헌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

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 등 4단계로 나뉘었다.

또한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중 상습 탈당자는 득표에서 25%,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천 불복 경력자'로 경선에서 감산을 받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최고위 출마' 이성윤, 광주서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이 첫 유세 공식 일정으로 15일 광주를 찾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5·18민주묘지에서 현화하고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은 원팀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정(친정태)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호남 유일 최고위원 도전자다.

이 의원은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으로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과 당원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5·18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45년 전 오월정신으로 불법 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선거는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선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치러지게 됐다.

친정계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문정복 의원, 진명계에서는 강득구, 이근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를 확정 지은 상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17일까지다. 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 전 당대회까지다. /도선인 기자 sunin@

진보 4개 정당 "다인 선거구 확대해야"

혁신·진보·기본소득·정의당 회견 "공개 공청회·의견수렴 시행하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多)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4개 정당은 1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도민 참여 절차를 마련해 중대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은 전남도민의 대표성과 정치적 권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라며 "도민 참여형 공개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전남은 이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3·5인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개혁적 방향을 분명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

'불출석 사유 납득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조 추진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권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권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했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